

대구광역시 환경보건조례안

의안 번호	6290
----------	------

제출연월일 : 2022. 3.

제 출 자 : 대구광역시장

1. 제정 이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으로부터 피해 조사 및 그에 따른 예방과 대책 마련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다.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처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라. 환경보건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불임 참조

나. 관계법령 : 「환경보건법」 제6조의2 등 (※ 불임)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22. 2. 28. ~ 2022. 3. 21.(21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개선의견(1건) 반영

4) 갑질영향심사 : 개선의견(1건) 반영(부패영향평가 개선의견과 동일건)

-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중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불명확하고 자의적인 권한행사의 우려가 있다는 검토의견에 따라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규정을 수정(안 제9조제2항)

⇒ “위원장이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긴급히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행사항을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5)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6)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환경보건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 제10조의2제4항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보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
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4. 산업단지,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환경보건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관할구역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환경보건위원회) ① 법 제10조의2에 따른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대구광역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보건계획의 수립과 변경
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3. 제9조제2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4. 그 밖에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녹색환경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소속 환경보건 관련 공무원
2. 환경보건 관련 전문가
3.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4.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건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건강영향조사 등)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인구
집단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건강영향조사반)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건강영향
조사반(이하 “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조사반의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시장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의 반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건강영향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건강영향조사 청원) ① 시민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하여 긴급히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행사항을 위원회에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① 시장은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매체와 환경유해인자를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대책을 수립·이행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련 대책을 세우고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행정·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연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
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
3. 그 밖에 시장이 환경보건증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환경보건법

제6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조사·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세워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환경보건에 관한 기본적 시책과 목표
2.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환경성질환 및 그 밖에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적절한 시책 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질환의 발생 현황
3. 환경유해인자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피해에 관한 사항
4.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
5.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분석·예방 및 관리 방안
6.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7.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인근 주민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8. 수용체 중심의 통합적 환경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9.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10. 환경보건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
11. 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 등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종합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10조의2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심의(지역환경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종합계획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세운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환경부장관의 요청 등에 따라 지역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계획의 내용 및 수립·변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 ① 지역의 환경보건 증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과 변경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
3. 관할 구역의 제17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4. 그 밖에 지역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환경보건 전문가
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
4. 소속 공무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건강영향조사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
2.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3.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등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이 현저하거나 현저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

②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 등 특정 인구집단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4조제4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의 원인이 되는 환경유해인자의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⑦ 누구든지(환경유해인자 관련사업자는 제외한다)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그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짓 진술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건강영향조사의 청원) ① 국민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자신의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줄 것을 청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청원을 처리한다.

1. 환경부장관

가. 2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대상인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마.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시·도지사: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관할 지역에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와 지역위원회의 심의(지역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거쳐 청원의 처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토를 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으면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위원회 또는 지역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원을 심의할 때 해당 청원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심의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뚜렷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서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에 따른다.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2(지역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환경보건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에 관한 현황
3.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4.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오염에 취약한 지역의 주민에 대한 특별관리 대책
5.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6. 지역계획에 반영된 시책의 시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7. 그 밖에 관할 구역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6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역계획의 사업 시행에 드는 총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2. 계산착오, 오기, 누락이나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④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의2(지역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보건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의견 청취, 자료 제출, 수당·여비, 운영세칙에 관하여는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로 본다.

제13조의2(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운영) ①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1. 환경부장관: 중앙건강영향조사반
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역건강영향조사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앙건강영향조사반 및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의 반원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환경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2. 환경보건, 인체독성, 환경매체 및 역학조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③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영향조사반의 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활동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건강영향조사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역건강영향조사반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한다.

대구광역시 환경보건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대구광역시 지역환경보건계획 수립
- 위원회 및 건강영향조사반 운영
- 건강영향조사·역학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2. 미첨부 근거 규정

「대구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본 제정안은 대구광역시 환경보건계획 수립 및 환경관련 건강피해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 녹색환경국 환경정책과장 권숙열